

세계 최초 온라인 농산물도매시장... 2027년 3.7兆 거래목표

농식품부, 공식 출범식 개최

상품거래 후 산지서 구매처 직배송 물류 최적화로 유통비 절감 기대 생산자·구매자 선택권 늘어나

온라인상의 농산물도매시장이 세계 최초로 열렸다. 유통단계별 비용을 줄여 농민 소득 증대와 소비자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일정요건을 갖춘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전국 단위 시장으로 유통업 정부가 중점 추진한 국정과제이다. 올해 2월 민·관 합동 개설작업반을 구성,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선 지 10개월 만에 개장했다. 농식품부는 2024년 거래목표 5000억원에서 본궤도에 오르는 2027년에는 3조7000억원의 거래목표를 갖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상품거래가 체결된 이후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배송되어 물류 최적화가 이루어진다. 기존 시장 대비 유통단계가 3단계에서 1~2단계로 줄고 유통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생산자는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출하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출하 선택권이 확대된다. 구매자도 전국의 상품을 플랫폼에서 비교·구매할 수 있어 합리적 가격으로 농산물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진다.

농식품부는 온라인시장의 기능 점검·보완을 위해 추진한 과일 및 사업 기간 (10월16일~11월 10일) 중 111건의



30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공식 출범식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다섯번째)과 참석내빈들이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

거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농가수취가격은 오프라인 대비 4.1% 상승, 유통경로 단축 및 물류 최적화로 인해 출하·도매 단계 비용은 7.4%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거래 상품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대량 거래 농산물 품질관리 역량을 고려해 출범초기 판매자 자격요건은 연 거래 규모 50억 원 이상 생산자단체·법인으로 설정했다. 품목, 수량 등 기본정보 외에 온라인 거래에 적합하도록 당도·산도, 색택, 크기(cm) 등 상세한 품질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품질 관련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 자율조정부터 분쟁조정위 중재까지 3단계 과정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또 판매자·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이용 수수료(거래 금액의 0.3%)를 3년간 면제하고 구매자 대상 특별 보증보험증권(보험료율 상한 1.85%) 제공 및 일부 보험료 환급도 지원한다. 물류업체 매칭 수수료(10%), 견본택배비 등 물류 관련 비용도 지원한다.

이날 온라인도매시장 1호 거래 품목은 양파였다. 판매자는 전남서남부채소농협, 구매자는 요식사업자 백종원씨가 대표인 더본코리아였다. 더본코리아가 발주한 10톤을 전남 무안의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 선별 과정을 거쳐 음성 전처리센터까지 직배송한다.

정황근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운영하는 온라인도매시장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전인미답의 길”이라며, “온라인상 또 하나의 가락시장을 만든다는 목표로 2027년까지 3조 7000억 원 규모로 온라인도매시장을 키우고, 이를 통해 도매 단계 유통비용을 7000억 원을 절감해 그 혜택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중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2027년까지 산지 농산물유통센터(APC) 100개소를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로 전환하고, 민간의 유통혁신과 신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디지털화된 농산물 유통정보 공개 등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차상근 기자 skc8472@metroseoul.co.kr

권익위 “육아휴직 장려금 환수, 위법·부당”

지자체 중복지급 환수 규정에도 명백한 근거 없는 불이익 처분 안 돼

지자체가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외에 추가로 중복 지급한 장려금에 대해 환수규정을 뒀더라도 이를 확대해석해 환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A지자체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에 명백한 근거 없이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장려금 환수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지자체는 시 조례로 육아휴직 확대를 통한 가정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자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도로 최대 6개월간 매달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 조례는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 휴직을 한 부모에게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하는 특례규정(시행령 95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 3개월까지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B씨는 2021년 11월에 자녀가 태어나 2022년 3월부터 약 3개월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했는데,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

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하는 다른 특례규정(시행령 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해당 지자체 장려금 89만원을 받았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B씨가 3개월의 휴직기간 중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시 조례에서 정한 중복지원 금지 규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장려금 89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B씨는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중복지원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중앙행정심판에 해당 지자체의 장려금 환수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은 B씨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특례규정(시행령 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것이고, 다른 특례규정(시행령 95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을 받은 경우에 한해 환수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이를 적용한 것은 확대해석한 것으로 환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며 “잘못된 근거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산업부, 車·ICT 등 이업종 간 협업 추진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 총회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차량과 보행자를 연결하는 개념인 ‘커넥티드 모빌리티’ 국제표준화 대응과 상용화 추진에 민관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송도 컨벤시아 그랜드볼룸에서 커넥티드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위한 민관 합동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회에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LG전자, 카카오모빌리티, SK윌더스, KT 등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날 행사에 완성차 업계, 자율주행·반도체·통신·소프트웨어 등 분야별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동차-정보통신기술(ICT) 등 이(異)업종 간 협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는 작년 11월 전자부품시스템분과·융합보안분과·서비스플랫폼분과·모빌리티분과 4개 분과, 37개 기관으로 출범해, 그간 자동차를 넘어 지상·항공 모빌리티를 아우르는 모빌리티 산업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참여기관도 88개로 확대됐다.

지난 1년간 얼라이언스는 전기차 충전 보안 표준화, 기업 간 상호 연계 실증, 자율주행시스템 개발 협력 등 다양



/유토이미지

한 협업과제를 논의해 커넥티드 모빌리티 협업 생태계를 만들었다.

내년에는 20개 이상 기업 간 실질적인 협업사례 도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독일 대표 클러스터 ‘ITS MOBILITY’와 표준화 및 공동연구 협력 양해각서(MOU)를 추진하며, 독일 내 현지사무소를 통해 유럽지역 대규모 실증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ITS MOBILITY는 유럽전기통신 표준협회(ETSI)와 협력해 통신 표준을 개발하는 Car2Car 컨소시엄 주관사로,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와 함께 표준화활동, 시범테스트, 공동연구 등에 협력하게 된다.

산업부는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가 미래 모빌리티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자, 산업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주요 핵심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고용부 “종사자 수 최다 업종 ‘복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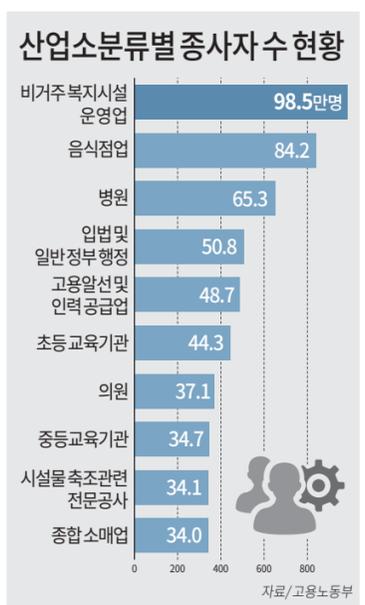
‘소분류별’ 사업체 종사자 수 발표

음식점업, 전년비 증가폭 가장 커 220개 산업 소분류별로 세분화

올해 4월 기준 ‘세부화된 산업별’ 종사자 수 최다 업종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98만50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점업(84만2000명)과 병원(65만3000명)이 각각 2, 3위였다. 또 입법 및 일반정부행정(50만8000명),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48만7000명), 초등교육기관(44만300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 ‘소분류별’ 사업체 종사자 수를 발표했다.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폭이 큰 산업은 음식점업(+5만6000명),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2만9000명) 순이었다. 감소폭이 큰 산업은 입법 및 일반정부행정(-1만6000명), 그 외 기타개인서비스업(-1만3000명) 등이다.

고용부는 대·중분류별 업종을 좀더 구체화한 소분류별 종사자 수 발표를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20개 산업소분류별로 세분화된 사업체 종사자 수에 대한 통계 작성은 이번이 처음이



다. 그간 산업 대·중분류에만 중점을 둔 반면 소분류는 1년 이상 경과된 전수조사자료를 활용한 바 있다.

중전의 소분류는 시의성이 떨어진다 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앞으로는 표본수가 가장 많은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연 2회)를 활용해 최신의 산업소분류별 종사자 수를 생산하게 된 것이다.

개선사항으로, 활용가능한 산업분류 공표수준이 기존 중분류 71개에서 소분류 220개로 늘었다. 산업소분류 공표 시의성과 관련, 이번 발표가 원래대로라면 2021년 12월을 기준 삼았겠지만 개선돼 2023년 4월을 기준으로 뒀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는 세부 산업별 동향 파악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수주 호황인 조선업 종사자 수 동향 파악을 위해 기존에는 중분류인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을 찾았다면 앞으로는 소분류인 ‘선박 및 보트 건조업’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회복에 따라 업황이 개선 중인 여행업 종사자 수도 확인할 수 있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개편이 지난 수년간 추정방법 연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뤄졌다고 밝혔다.

편 정책관은 “이번 공표가 각 산업의 세부영역별로 상세한 종사자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신뢰성 높은 통계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